

The 2nd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ssues and Strategies in 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November 6th, 2018 14:00~17:1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

주 제 :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14:00 ~ 17:10

장 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일 정
14:00~14:15(15분)	등 록
14:15~14:30 (15분)	개 회 사회: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 국민의례
	개 회 사
	인사말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김태헌 원장(아태인구연구원)
14:30~15:45 (75분)	주제발표 1 중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가제) 김병철 교수(중국인민대학교)
	주제발표 2 일본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가제) 이연화 교수(동경경제대학교)
	주제발표 3 한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가제) 도남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15:45~16:00(15분)	휴 식
16:00~16:50 (50분)	좌 장 김태헌 원장(아태인구연구원)
	토 론 은기수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근 교수(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신은영 교수(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6:50~17:10(20분)	질의응답
17:10	폐 회

Contents

Welcoming Address	1
Congratulatory Address	5
주제발표 1 중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9
주제발표 2 일본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19
주제발표 3 한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37
토 론	55
은기수 교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은영 교수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근 교수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신은영 교수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The 2nd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ssues and Strategies in 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elcoming Address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과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더 없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책세미나를 위해 중국에서 오신 김병철교수님과 일본에서 오신 이연화교수님께 따듯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시고,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학술교류에도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으로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 및 인구 정책 관련하여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의 다가올 저출산 정책의 모색, 일본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 한국은 최근 초저출산 위기에 대처하여 저출산 계획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층 연구를 통해 전략적 동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교육·보육을 비롯한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국책연구소로서 중국과 일본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사회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저출산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학문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축사를 위해 먼 길을 해주신 김태현원장님, 중국에서 오신 김병철교수님, 이연화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은기수교수님, 최은영교수님, 김영근교수님, 신은영교수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The 2nd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ssues and Strategies in 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ongratulatory Address

축 사

안녕하십니까? 아태인구연구원장 김태현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축하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백선희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 해 주실 중국인민대학교의 김병철 교수님, 일본 동경경제대학교의 이연화 교수님, 그리고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도남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지정토론과 일반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출생아수는 35만 여명으로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월별 출산동향을 보면 금년의 합계출산율은 0.97명 내외로 낮아지고, 출생아수는 32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출산율 회복의 징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의 지속은 개인의 삶의 질의 유지는 고사하고, 우리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의 심각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장래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아시아 3개국의 최근 인구변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그 효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 아시아 3개국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이 경험하는 저출산 쟁점들은 인구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인구변동의 특성과 정책적 대응을 비교하고, 성공요인과 장애요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한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백선희 소장님과 연구원들께 재삼 감사와 축하를 함께 드리고, 귀한 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일반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아태인구연구원장 김태헌

중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김병철 교수
중국인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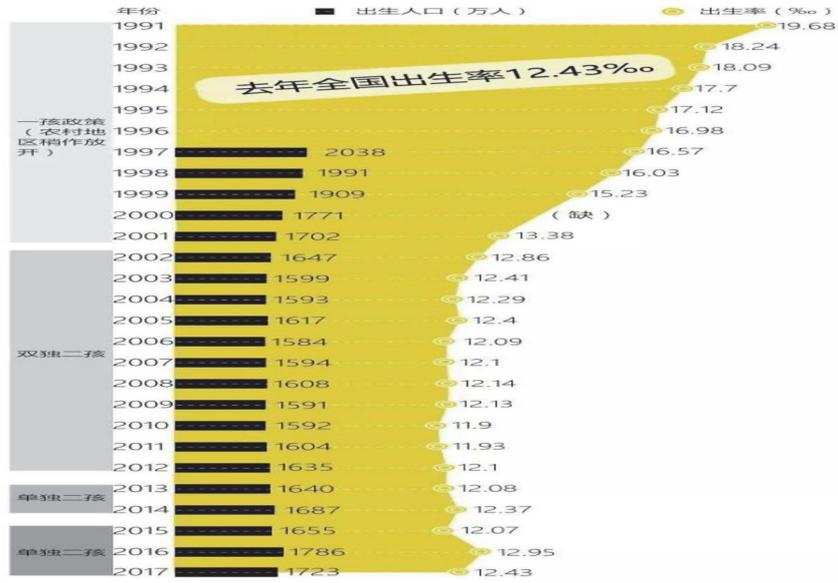
중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김병철 교수

목차

- 서론
- 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
- 중국의 출산정책 발전과정
- 중국의 가족정책 현황
- 향후 미래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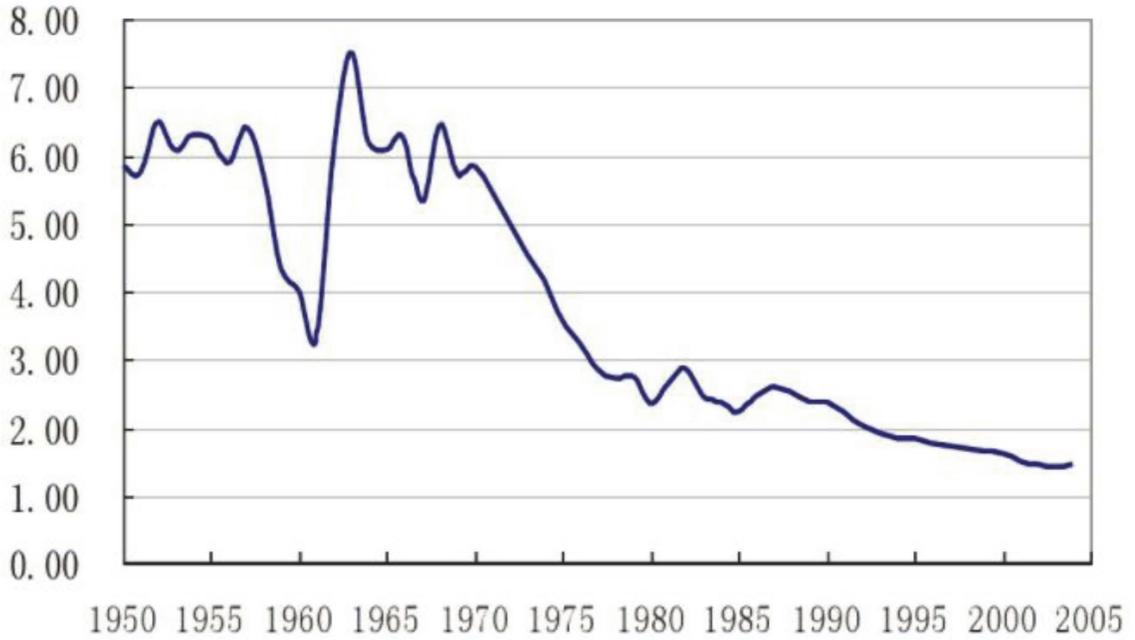
중국의 저출산 현황(Ⅰ)



중국의 저출산 현황(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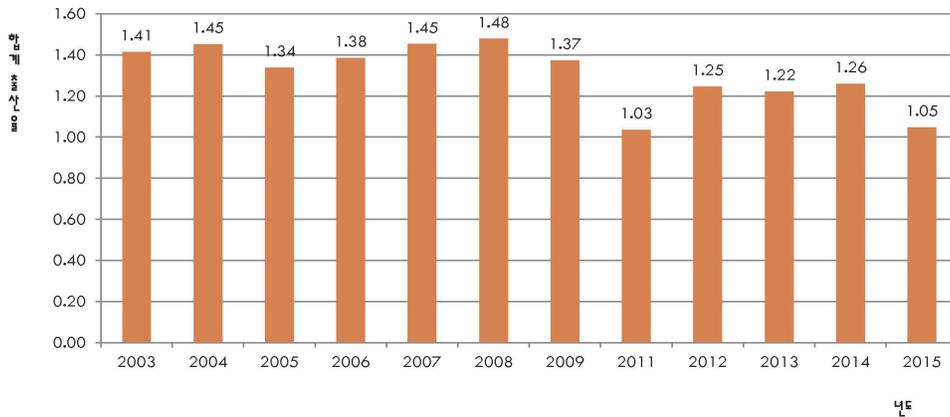
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	비율	둘째 자녀 출산율	비율	셋째 자녀 출산율	비율	합계 출산율
2003	1.03	73%	0.33	23%	0.06	4%	1.41
2004	1.05	73%	0.35	24%	0.04	3%	1.45
2005	0.89	67%	0.38	29%	0.06	5%	1.34
2006	0.94	68%	0.39	28%	0.05	4%	1.38
2007	0.99	69%	0.41	28%	0.05	3%	1.45
2008	1.01	68%	0.41	28%	0.05	4%	1.47
2009	0.92	67%	0.40	30%	0.05	3%	1.37
2011	0.67	65%	0.32	31%	0.05	5%	1.03
2012	0.80	64%	0.39	31%	0.06	5%	1.25
2013	0.77	63%	0.39	32%	0.06	5%	1.22
2014	0.72	57%	0.45	36%	0.08	7%	1.26
2015	0.56	53%	0.42	40%	0.08	7%	1.05

중국의 저출산 현황(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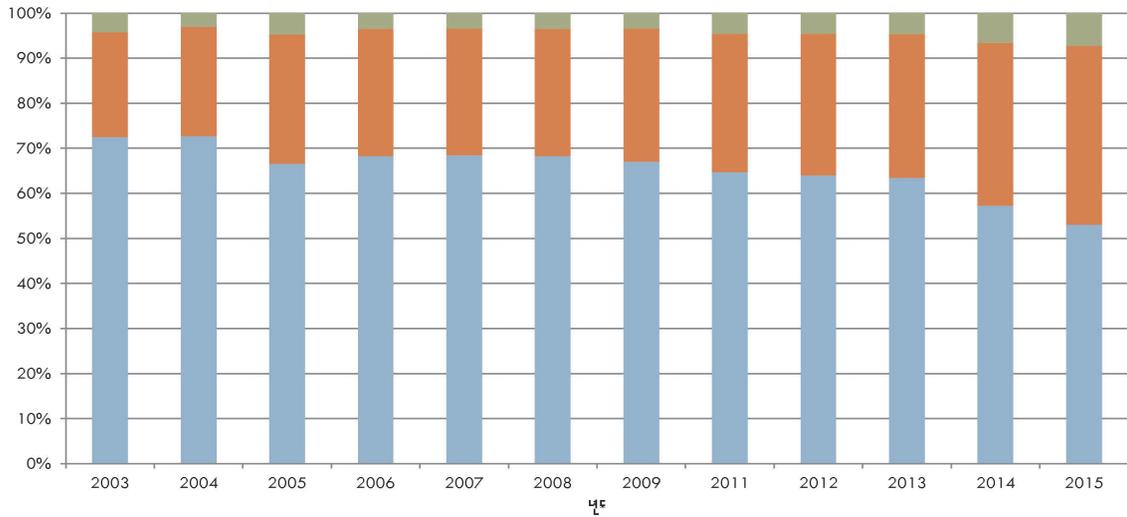
중국의 저출산 현황(Ⅳ)

중국 합계출산율 추이 (2003~2015년)



중국의 저출산 현황(V)

중국 자녀별 출산율 현황 (2003~2015년)



중국의 저출산 원인

- 중국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1위이지만 출산율은 1.50위권.
- 가임연령 여성(15~49세) 감소.
- 장기간 지속된 산아제한 정책에 익숙해짐.
- 최근 경제적 부담 증가.
- 일-가정 병행 문제.

중국의 출산정책 발전과정

- 출산 관련 정책 미 실시 시기 (1949~1973)
- 관대한 출산 정책 실시 시기: 두 자녀 정책 (1973~1979)
- 한 자녀 정책 실시 시기 (1979~2010)
- 외동딸, 아들딸 부부 둘째 자녀 출산 가능(2011~2015)
-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실시(2016년~현재)

중국의 가족정책 현황(I): 현금 급여

- 아동수당, 가족수당, 아동 세금 감면 등 보편적 현금급여가 없음.
- 출산보험은 여성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에 따라 출산수당 권리 보장.
-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지급.

중국의 가족정책 현황(Ⅱ): 출산휴가

- 중국 모성휴가는 법으로 명시.
- 모든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활성화.
- 모성휴가는 2012년 4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 90일에서 98일로 확대됨.
- 한편 부성휴가는 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중국의 가족정책 현황(Ⅲ): 보육지원

- 보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제한적.
- 서비스의 실시, 발전, 전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사전 보육제공은 기업들과 가족에 의해 실시.

향후 미래의 전략

- 고령화 저출산 심화에 따라 중년이 이르면 오는 2020년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
- 전인대 상무위원회 민법 초안 수정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계획.
- 민법 초안에 따르면, 중년이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이상 제한하지 않을 전망.

일본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이연화 교수
동경경제대학교

저출산대책 30년: 일본의 경험과 현위치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2018.11.6

1

R.Q.

- 일본의 저출산문제는 해결/완화되었는가?
-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국제비교(특히 한국과의 비교)에서 본 일본의 특징

2

outline

0. 출생율과 인구동향의 현위치
1. 1990년대의 저출산대책
2. 2000년대의 저출산대책
3. 2010년대의 저출산대책
4. 일본의 특징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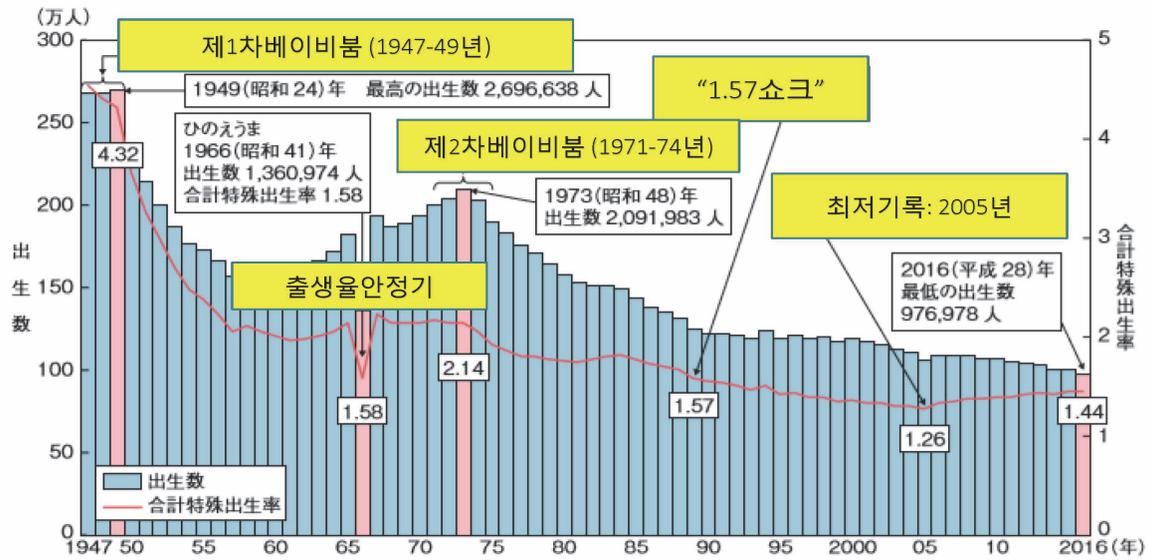
3

결론부터

- 출생율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출생수는 여전히 감소 급격한 인구/노동력감소가 진행중
- 가족정책, 제도는 현재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 단, 제도와 현실의 격차(ex. 남성의 육아휴직)
- 조용한 패러다임전환이 진행중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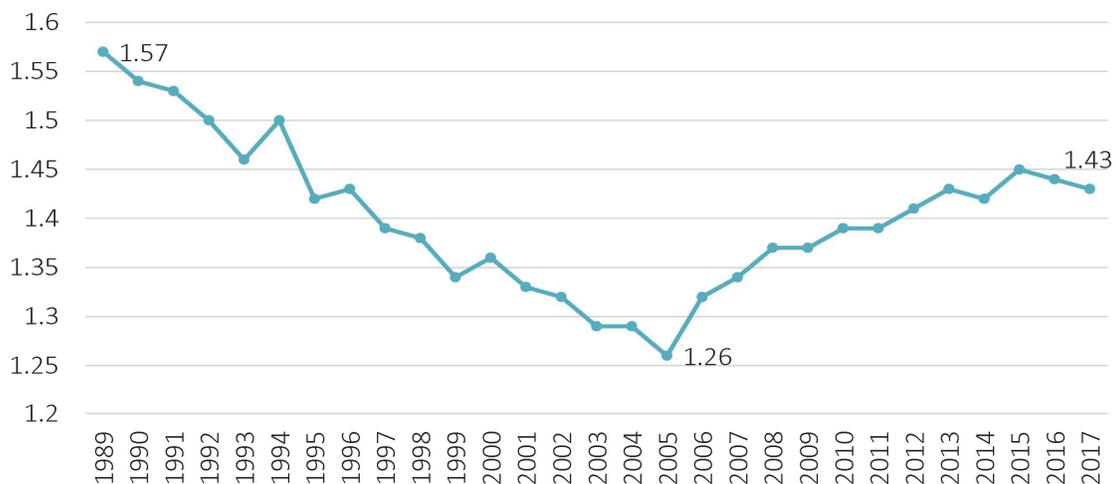
출생수와 합계출생율(1947-2016)



출처: 내각부, “2018년 소자화사회대책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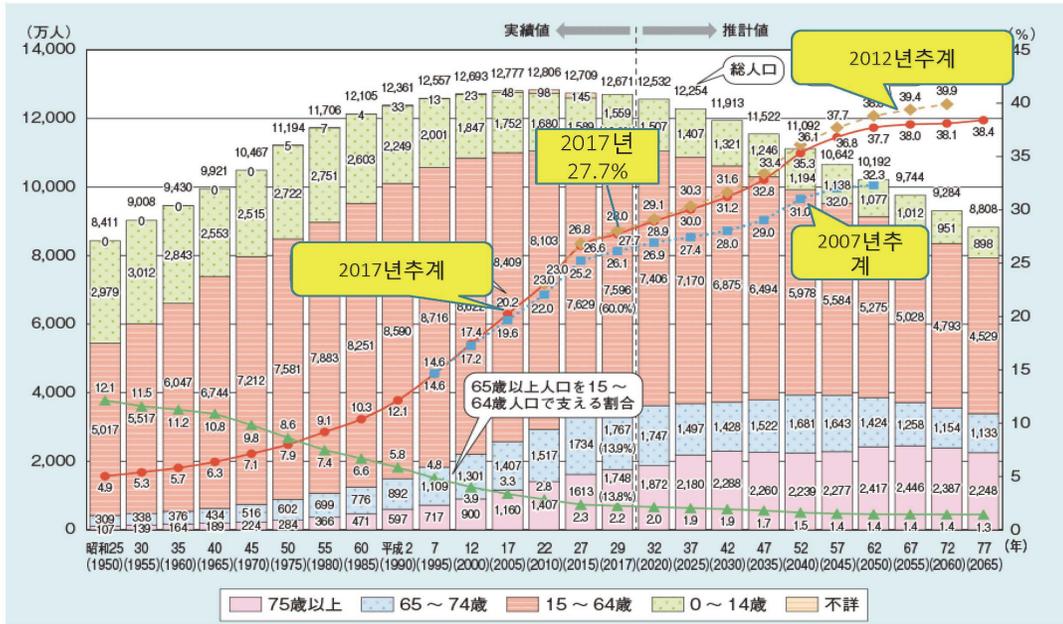
1990년대이후의 합계출생율



출처: 국립사회보장과 인구문제연구소, “인구관련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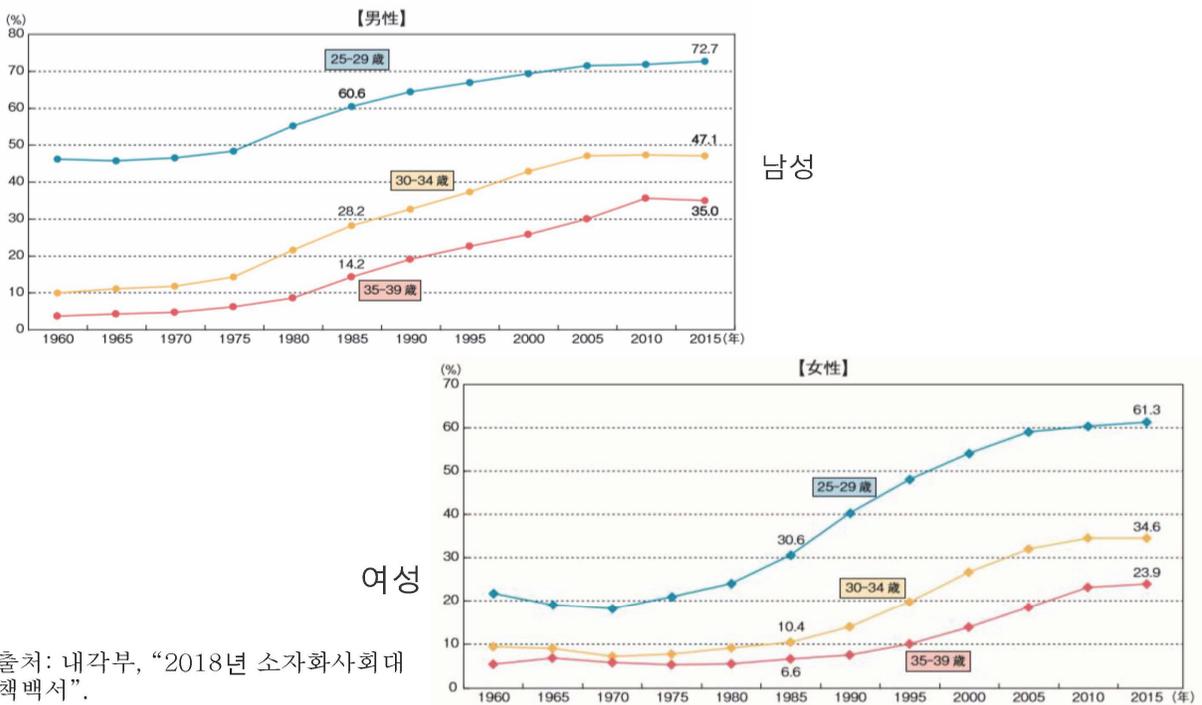


총인구와 고령화율(1950-2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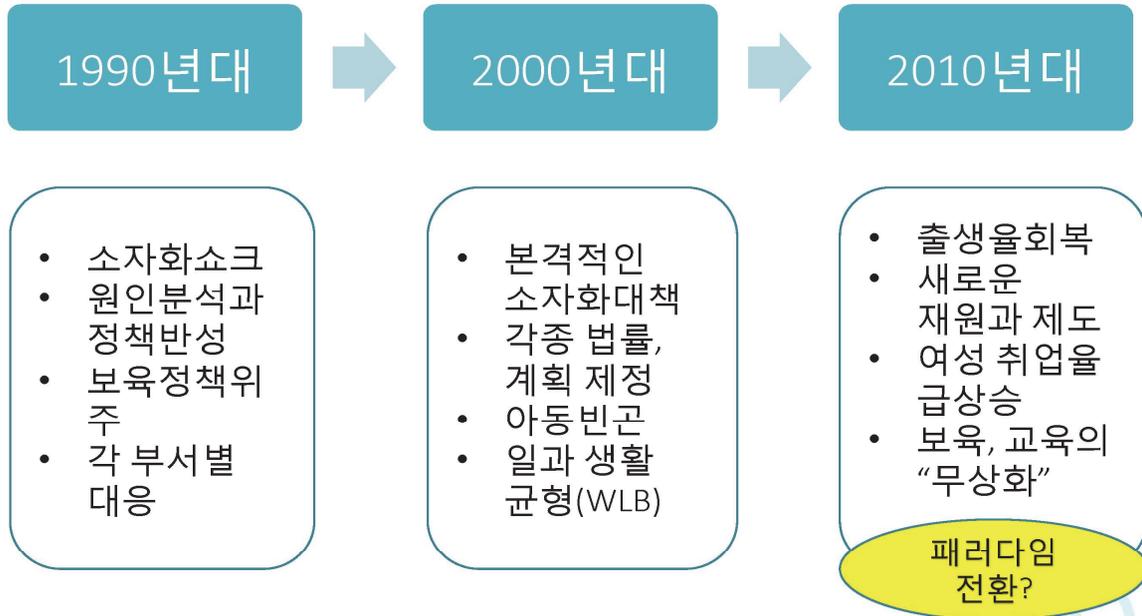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8년 고령사회백서”.

연령별 미혼율



시기별 주요문제와 정책대응



1.1. 1990년대: 소자화쇼크

- 1975년부터 출생율 하락 시작
- 1980년대 개인주의, 소비주의 침투, 가치관의 변화
“일본형복지사회” (가족복지 강조)
male-breadwinner model의 강화
- 1986년 “남여고용기회균등법” 시행
- 1990년의 “1.57쇼크”(1989년출생율)
- 경제호황중의 저출산
- 예상“내”의 고령화 vs. 예상“외”의 소자화
- 1992년 “소자화”(少子化)개념이 정부문서에 출현

1.2. 1990년대전반: 긴급대책

- 1994년 “엔젤플랜”(향후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 제정
- 긴급보육대책등 5개년계획:방과후보육, 병아보육, 사업소내보육소
- 저출산원인에 대한 인식:
 - 1)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일과 육아의 양립곤란
=> 1991년 “육아휴직법”(1992년 시행), 휴직기간의 사회보험료 면제
 - 2) 과도한 교육경쟁
=> 교육개혁: ゆとり(여유있는) 교육, 주5일제, 수험기회 복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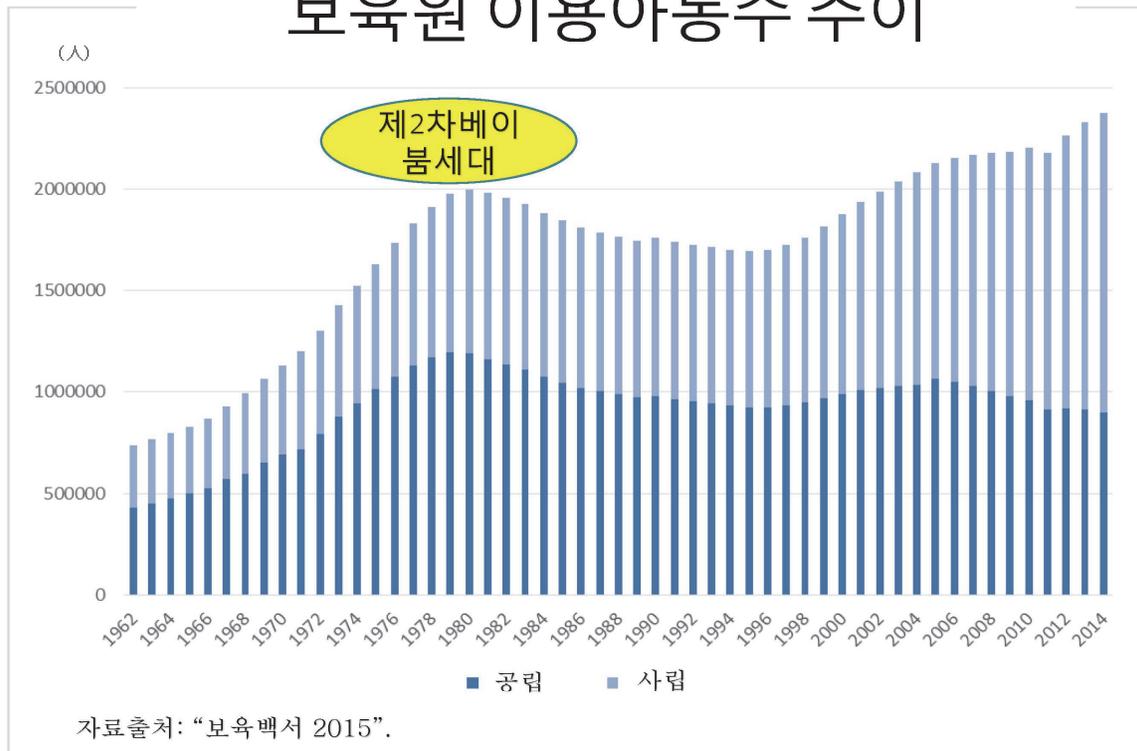
11

1.3. 1990년대후반: 반성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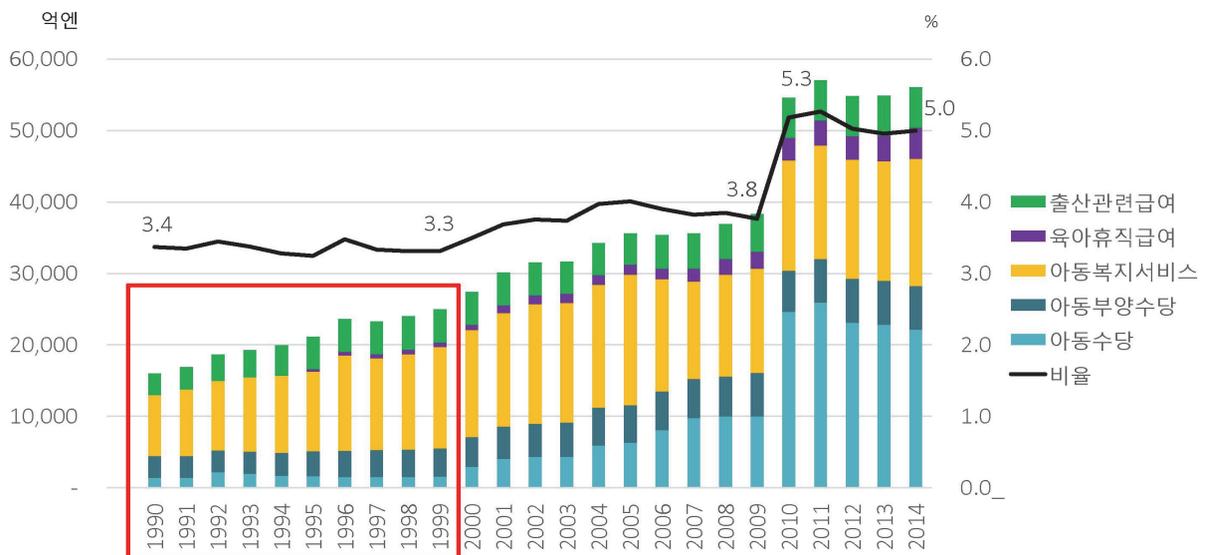
- 1997년 인구문제심의회: “소자화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
- 저출산대책의 핵심: 고정적인 성역할분업과 고용관행의 시정, 육아지원을 통한 일과 육아의 양립
- 강력한 국가개입에는 주저
- 전쟁기간의 출산촉진정책에 대한 반성
- 국가가 개인의 생활과 가치관에 대한 개입에 대한 위구
- 제3차베이비붐에 대한 기대
- 경기불황과 맞벌이부부, 보육이이용아동의 증가
- 1999년 “신 엔젤플랜”(재무부, 자치부도 참가)

12

보육원 이용아동수 추이



일본의 아동과가족 관련급여(1990년대)



2.1 2000년대전반: 소자화대책의 본격화

- 출생율의 지속적인 저락
- 코이즈미내각(2001-06년) : 소자화대책 본격화
-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 2004년 “소자화사회대책대강” 제정
- 2005년 “어린이, 육아 응원플랜”
- 계속하여 떨어지는 출생율, 위기감 심화
- 2006년 “**새로운 소자화대책에 관하여**” :
 - 소자화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
 - 사회전체의 의식개혁(국민운동), 모든 가정에 대한 지원

15

새로운 소자화대책(2006년)

1. 신생아, 영유아기
 - 임신중 검사비용 경감
 - 불임치료지원 확대
 - 아동수당 인상
 - 가정방문 등

2. 취학전
 -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센터
 - 대기아동대책
 - 육아휴직, 단시간근무 보급
 - 유아교육비 지원 등

3. 초등학생
 - 방과후 어린이 플랜 등

4. 중, 고, 대학생
 - 장학금 확충 등

- 고용제도 개혁
- 청년층 취업지원
 - 여성의 재취업지원
 - 장시간 노동의 시정 등

- 기타 중요한 시책
- 육아지원 세제 검토
 - 세대간 교류 추진
 - 아동학대 방지
 - 모자가정 자립지원
 - 3세대주택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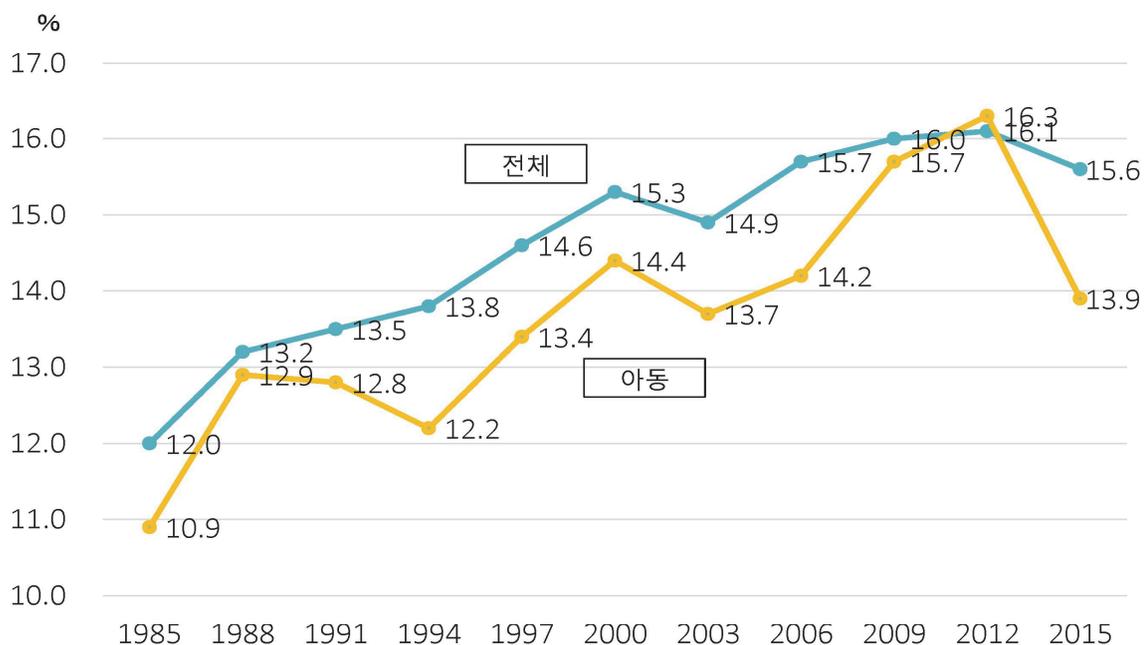
국민운동:
(1) 가족과 지역의 연대를 재생하는 운동 (2) 아동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

2.2 2000년대 후반: 이슈의 변화와 확장

-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모든 사람의 work life balance로
- 2007년 “일과 생활 균형(WLB) 헌장” 채택
- 전업주부가정의 육아부담과 출생율저하
=> 지역육아지원센터, 일시보육, 가정방문 등 강화
- 90년대 후반이후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과 빈곤율 상승
- 비정규직증가, 빈곤문제의 부상, 금융위기
- 의식이 문제인가? 경제적, 제도적 곤란이 문제인가?
- 2009년 정권교체후: 아동수당 -> 어린이수당(보편주의, 대폭인상)

17

상대적빈곤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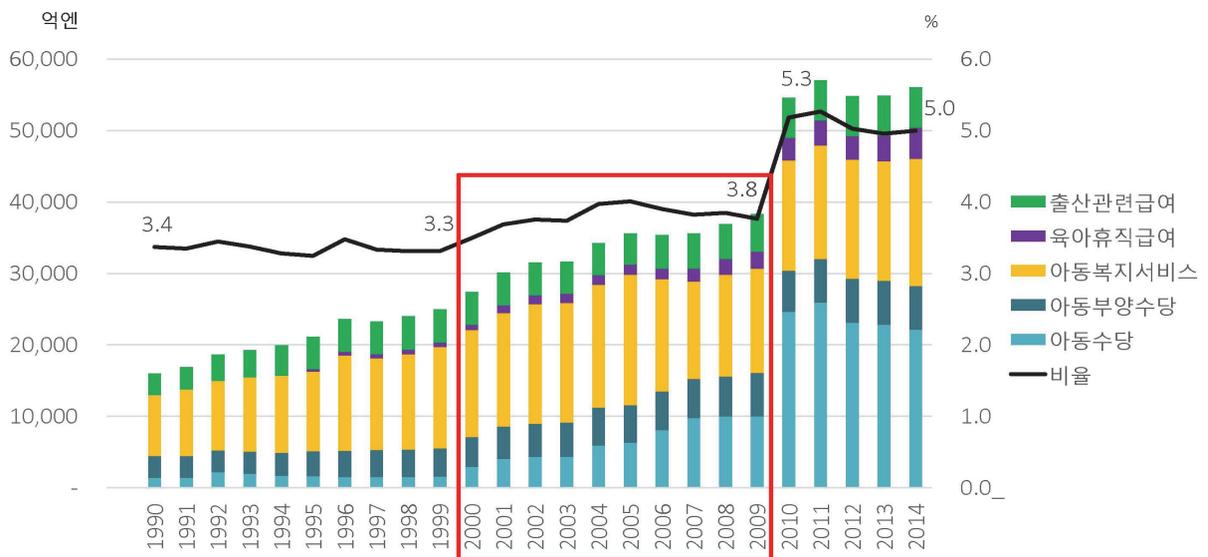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아동수당의 변화

연도	출생순서	지급대상연령	지급액(엔)	소득제한(지급율)
1971년	셋째이상	0~15세	3,000	있음(-)
1986년	둘째 셋째이상	0~2세 0~15세	2,500 5,000	있음(-)
1992년	첫째부터 (이하 같음)	0~3세	5,000~10,000	있음(-)
2000년		0~6세	5,000~10,000	있음(72% -> 2001년85%)
2004년		0~9세	5,000~10,000	
2006년		0~12세	5,000~10,000	있음(90%)
2007년			3세이하만 10,000	
2010년 (어린이수당)		0~15세	13,000	없음
2012년		0~15세	10,000~15,000	있음(소득제한이 상 특례급여)

출처: 辻由希(2012:116)을 일부수정.

일본의 아동과가족관련급여(2000년대)



자료출처 : 국립사회보장정책연구원, "사회보장비용통계".

3.1 2010년대전반: 신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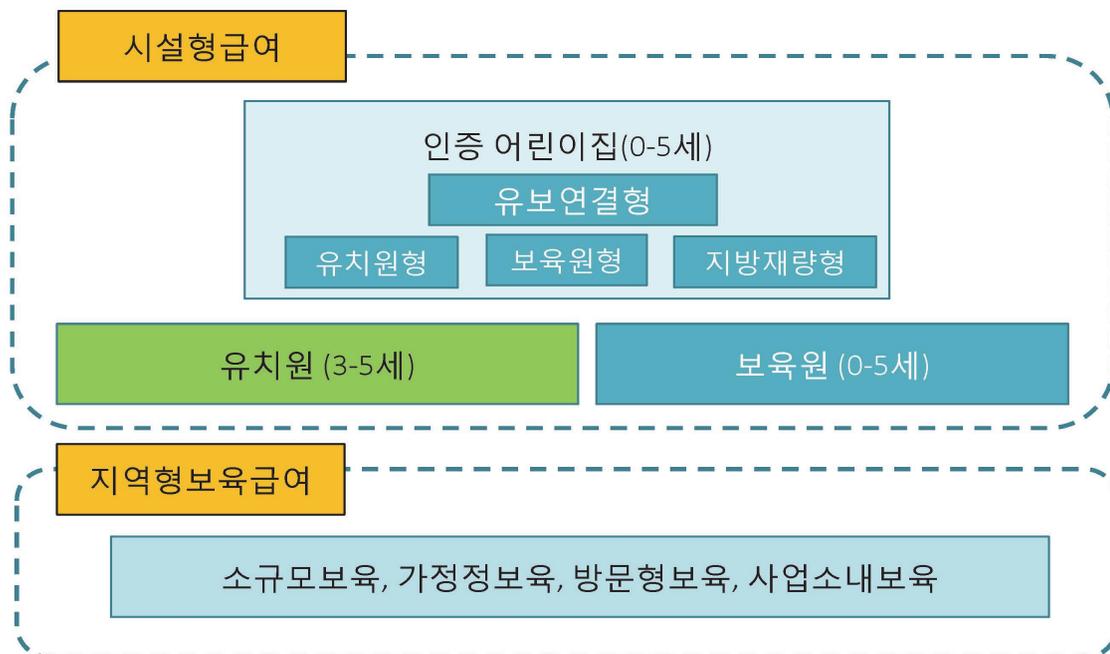
- 2008년 사회보장 국민회의: 새로운,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
- 2010년 “어린이, 육아지원 비전” 제정
 - 어린이, 육아지원 신 시스템 검토회의 신설
- 2012년 어린이, 육아지원 관련 법률 통과
- 2015년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 시행

<배경>

- 경기침체, 소자고령화중의 사회보장재원문제
- 2012년 소비세인상(5%에서 10%로)에 대한 여야합의
- 소비세의 용도: 연금, 의료, 개호, + 육아지원

21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



출처: 내각부,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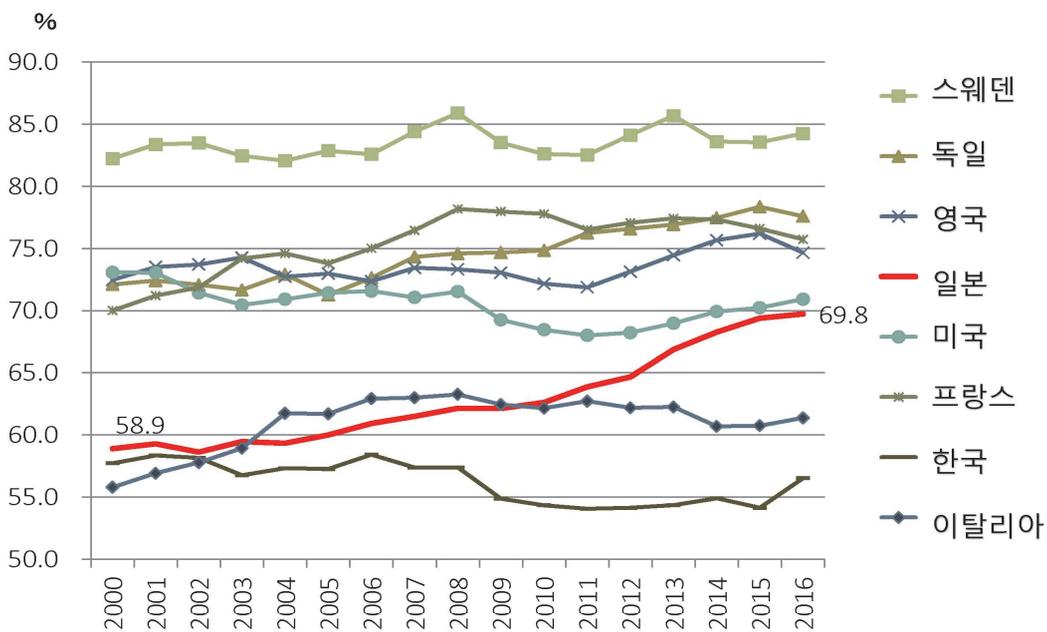
22

3.2 2012년이후의 구조적변화

- 제2차 아베내각:2012년~
- 출생율의 개선, 저출산대책에서 노동력정책으로
- 여성의 취업촉진,
- 여성취업율 급상승로 대기아동문제가 심각화
- 2013년 “대기아동해소가속화 플랜”
 - “소자화위기 돌파 긴급대책”
- 보육원의 양적확충: 보육사 대우개선, 기업내보육소 추진
- 2016년 “1억총활약 플랜”
- 働き方(고용)개혁: 노동시간규제 강화
- 2019년10월~: 유아교육,보육비 “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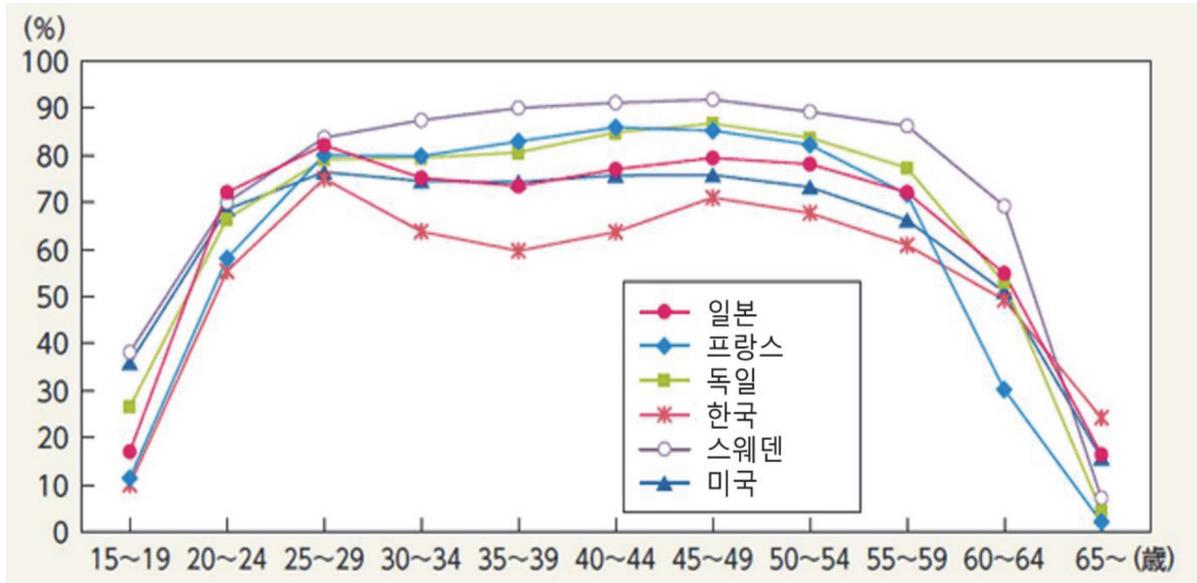
23

35-39세 여성의 취업율



출처: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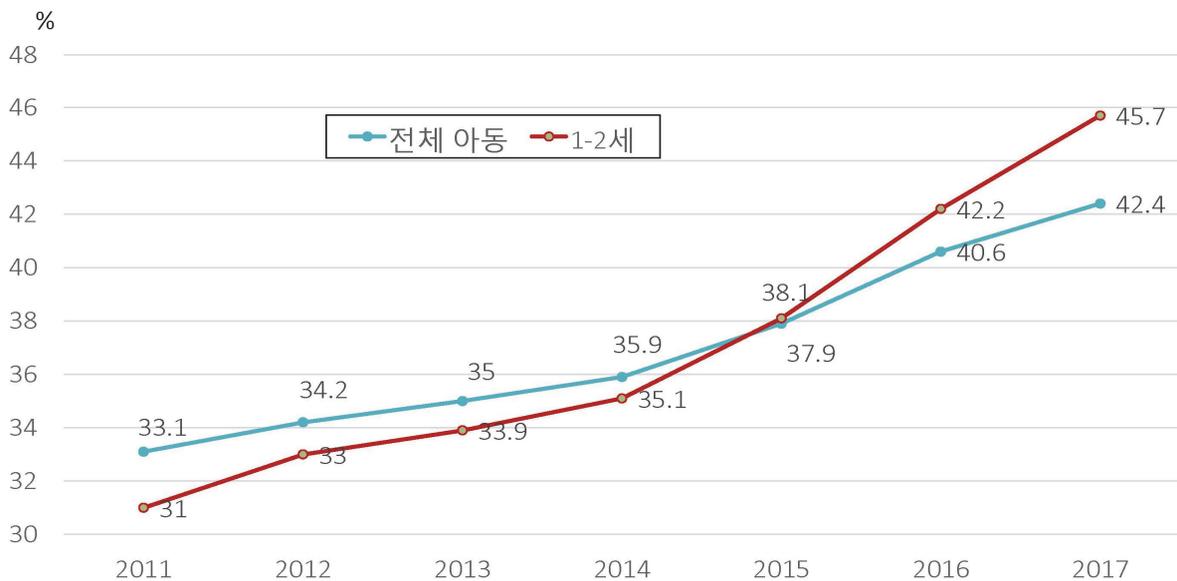
연령계층별 여성취업률



출처: 내각부, “2018년 남녀공동참여백서”.

25

보육원 이용률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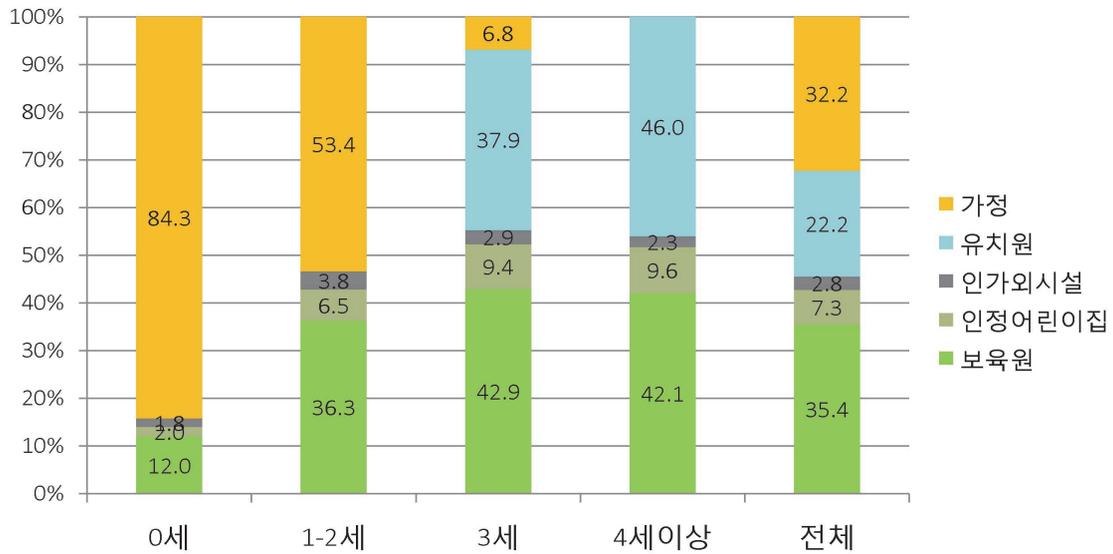


주: 인증어린이집 등 포함.

출처: 후생노동성자료.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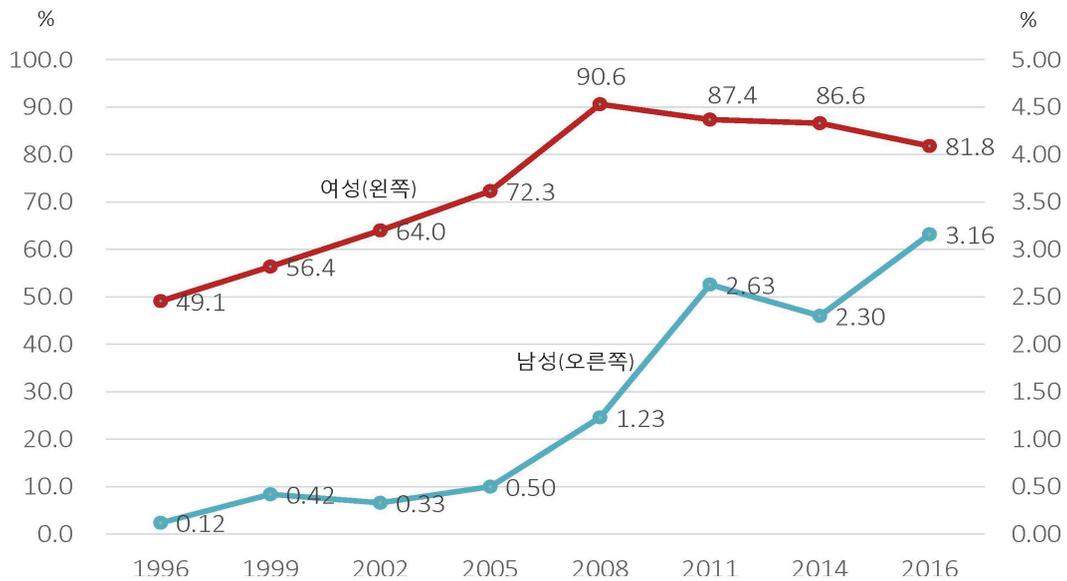
연령별, 시설이용별 아동비례



출처: "2017년 보육백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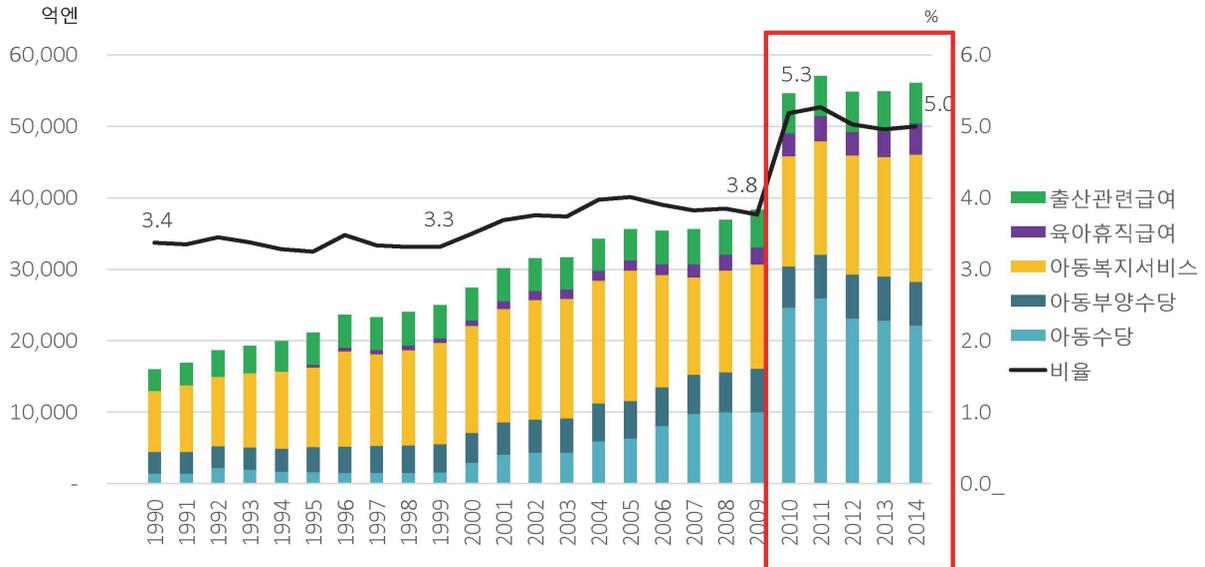
남여별 육아휴직취득율



자료: 후생노동성, "고용균등기본조사".

28

일본의 아동과가족관련급여(2000년대)



자료출처 : 국립사회보장과 인구문제연구소, “사회보장비용통계”.

4.1 일본의 특징

➤ 점진적인 대응

- 입법은 2000년대부터
- 제도변경과 지출변화는 2010년대부터
-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는 2019년부터

➤ 뿌리깊은 성역할분업의 변화

- 2012년이후 심각한 변화, 특히 여성취업율
- 하지만, 성역할분업은 잔존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파트타임, 유연근무 중심
- 독일, 네덜랜드의 복지국가 변화와 유사?

30

4.2 한국과의 비교

- ▶ 비명시적인 “가족” 정책
- ▶ 가정양육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없음(세제지원)
- ▶ 제한적인 보육의 시장화
- ▶ 육아기여성과 청년층의 높은 고용율

31

한국의 저출산 쟁점과 대응전략 분석

도남희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특징

동아시아 정책세미나 2018. 11. 6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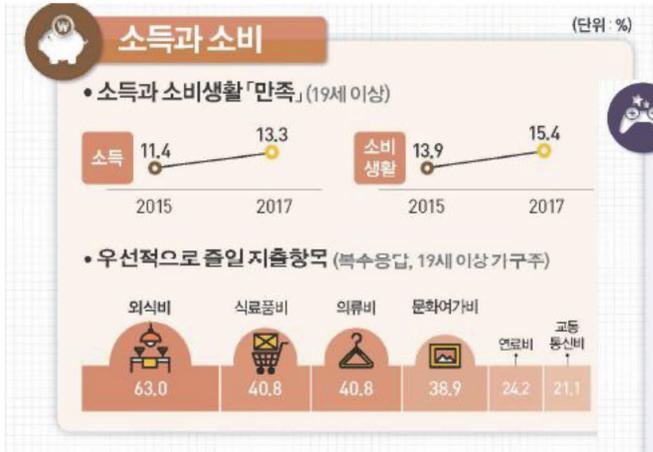


목차

- I. 서론
- II. 저출산 현황과 원인
- III. 저출산 정책과 특징
- IV. 향후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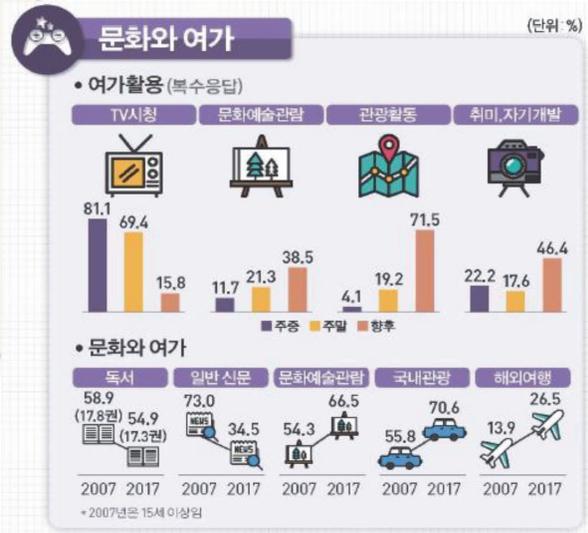


우리사회의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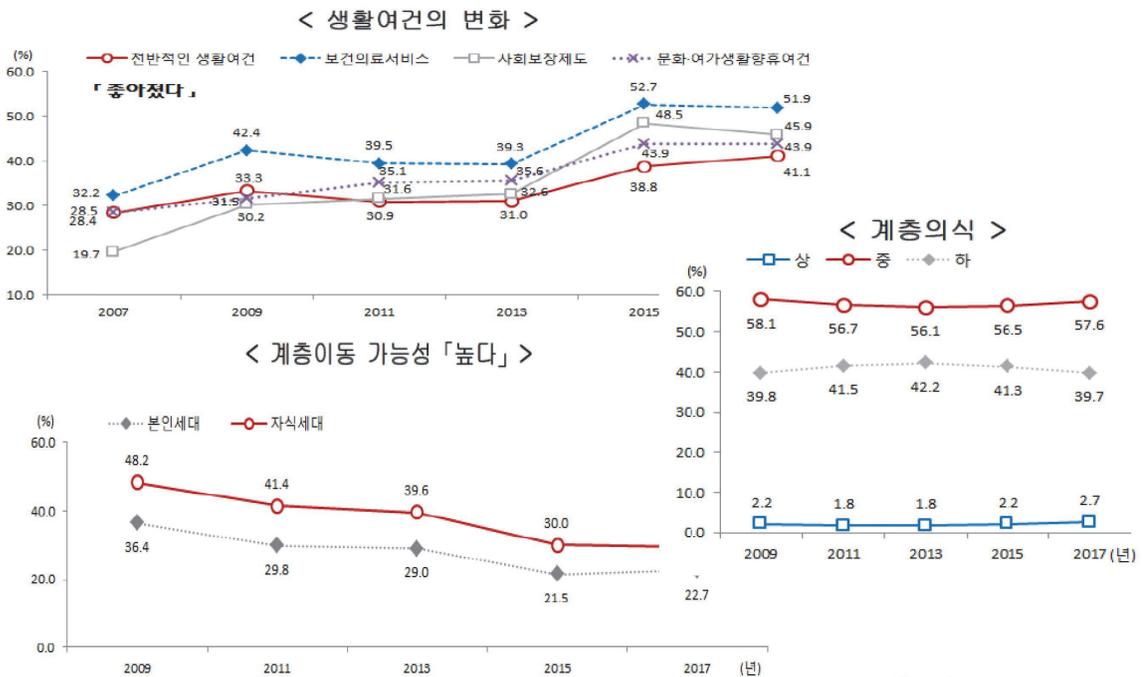
소득과 소비 생활의 향상

문화와 여가생활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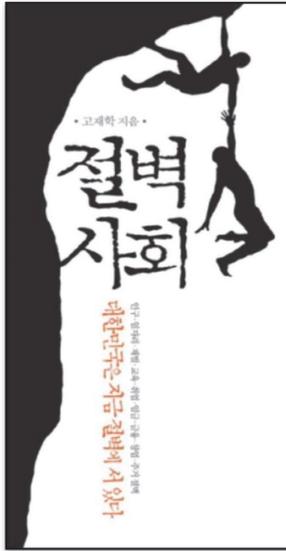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2017 사회조사 결과

생활여건의 인식



자료: 통계청(2017). 2017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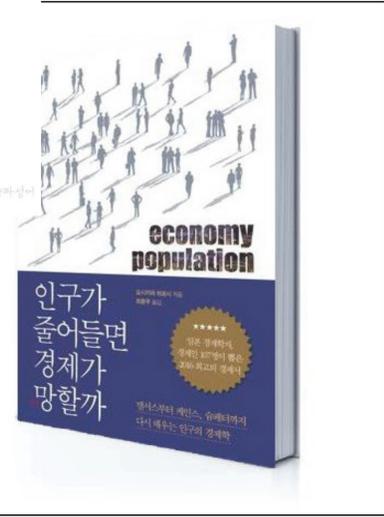
절벽사회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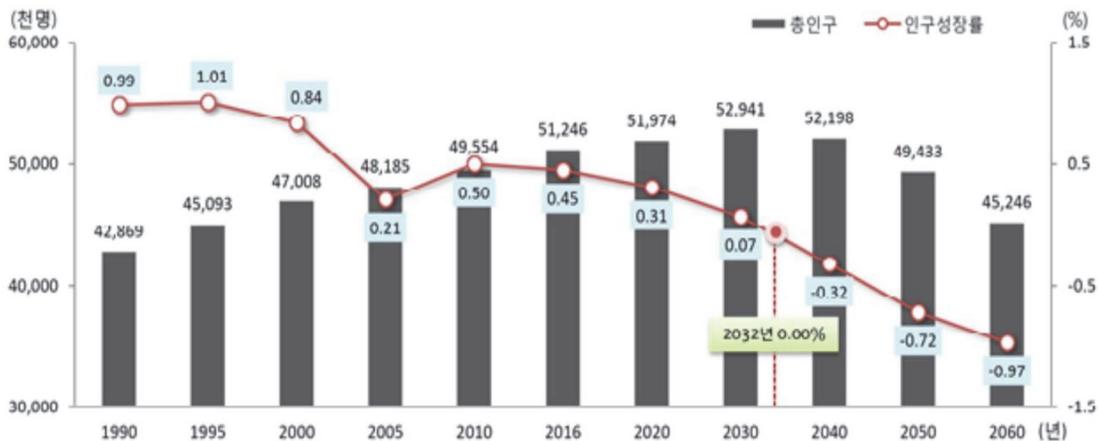
인구 절벽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
 구구절절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지만
 절대로 빼어올 수 없는 한가지 이유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린 '보육대란' 미봉책



인구성장률 감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12.

초혼 연령

- 초혼 연령: 남성 32.8세, 여성 30.1세
- 미혼남성 42.9%는 결혼에 찬성/미혼여성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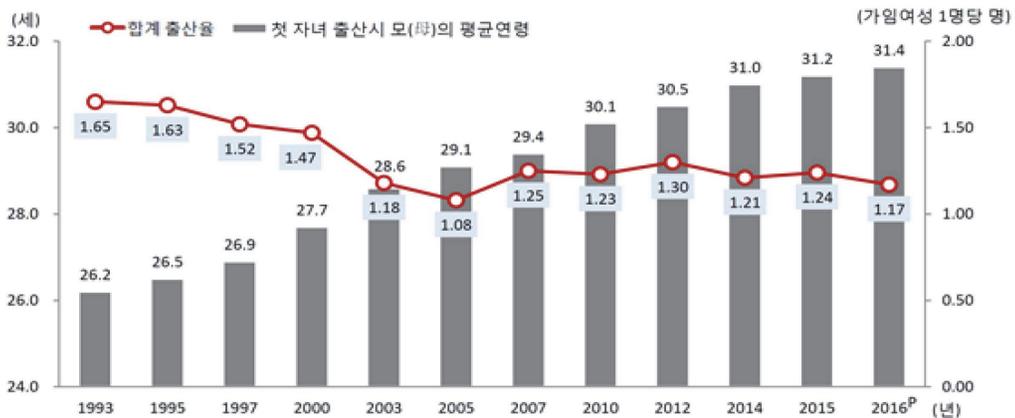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첫 자녀 출산

혼인건수 282,000건, 1970년 이후 30만건 아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출생·사망편)」,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혼인 건수 282,000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만건 하회



모(母)의 첫째아 출생 연령 구성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가구와 가족

- 2016년 부부, 부부+미혼자녀 가족 형태는 전년보다 증가함
-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가족형태 가구구성 】

(단위: 천가구, %)

연도	합계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2000	11,928	14.8	57.8	9.4	1.2	6.8	10.1
2005	12,491	18.1	53.7	11.0	1.2	5.7	10.4
2010	12,995	20.6	49.4	12.3	1.2	5.0	11.6
2015	13,693	21.8	44.9	15.0	1.1	4.2	13.0
2016	13,701	21.9	45.2	14.6	1.1	4.2	1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16 인구주택총조사」 2017.8.

주: 1) 1인 가구에서 비형여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하 가구수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¹⁾ 】

(단위: 천가구, %, 명)

연도	일반가구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평균 가구원수
2000	14,312	100.0	15.5	19.1	20.9	31.1	10.1	3.3	3.12
2005	15,887	100.0	20.0	22.2	20.9	27.0	7.7	2.3	2.88
2010	17,339	100.0	23.9	24.3	21.3	22.5	6.2	1.8	2.69
2015	19,111	100.0	27.2	26.1	21.5	18.8	4.9	1.5	2.53
2016	19,368	100.0	27.9	26.2	21.4	18.3	4.8	1.4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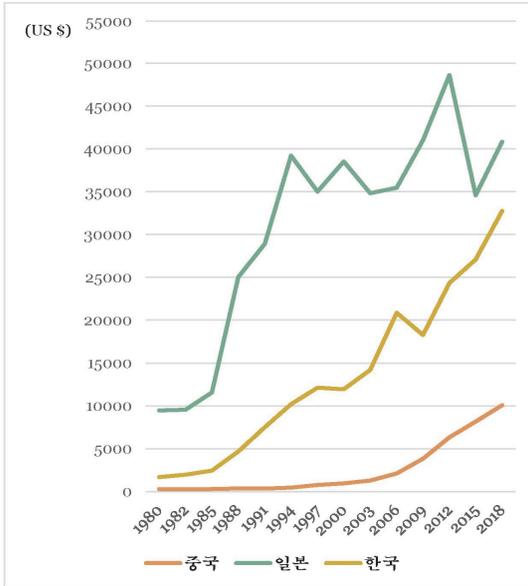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16 인구주택총조사」 2017.8.

주: 1) 외국인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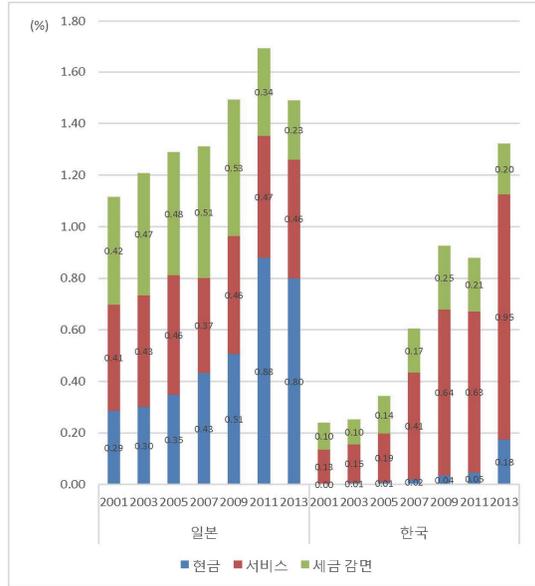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2017 사회지표

가족 공공지출

GDP per Capita(1980-2018)



GDP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2001-2013)



자료: IMF(201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 PF1.1



1차(2006~2010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구분	건강가정기본계획(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차)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급증 - 가정 내 자녀양육 및 교육 가능 약화 - 결혼, 가족, 성역할 등에 대한 인식 변화 - 가족 기능 약화와 돌봄 기능 공백에도 돌봄 분담 사회적 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 일·가정 양립 어려움 - 육아지원 시설 등 자녀양육 환경의 미흡
비전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사회의 남녀 및 세대 간 조화 - 가족 및 가족구성원 삶의 질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양육 장애요인 제거 -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확충
세부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돌봄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부담 경감, 가족돌봄 사회적 지원 강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족 참여 지원, 여성 경제활동 기반 구축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소외가족 맞춤형 서비스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 조성 5.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총괄 체계 정비,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 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2. 가족 친화, 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가족생활 문화 여건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주: 1)관계부처합동(2005).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2)관계부처합동(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요약본).



2차(2011~2015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구분	건강가정기본계획(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차)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가치의 재발견이 필요하며, 남성의 장시간 경제활동이 이를 저해함. - 시설중심 돌봄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돌봄에 부모와 지역사회 책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및 고령사회 본격 전환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연기 지속
비전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가정의 전생애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사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세부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가치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 자녀돌봄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돌봄 지원 다양화, 부모역할 지원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 지원체계 구축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2.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질 높고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 아동, 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주: 1)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2)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3차(2016~2020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구분	건강가정기본계획(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3차)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필요 -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증가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미흡 -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의 실현상 어려움 -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정책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여전히 미흡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강화 및 장기적인 정책 안목 요구) -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적 역량 집중 필요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합계출산율: 1.21('14) → 1.5명('20))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노인빈곤율: 49.6('14) → 39%('20))
세부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가족상담 활성화, 가족여가활동 확대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정 지원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가족돌봄 여건 조성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 가정 양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가정 양립 제도 정착, 남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실천 촉진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임신부 배려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양성평등 가속분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3.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 돌봄 확대,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4. 일,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이 평등한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5. 노후 소득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인구 다양사양 대비, 고령친화사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주: 1)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2)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본방향(1~3차)

구분	1차(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확충 및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제고 - 보육비용 정부 재정 부담률 제고 -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 보육서비스 선진화 및 취약 보육 영역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중장기 보육계획 보완 및 수정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수요자 중심 체계로 개편 -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위한 서비스 유형 다양화 - 보육서비스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출발선 기회 부여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 -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 부모 양육지원 확대

주: 1) 정책브리핑 사이트(2007), 제 1차 중장기보육계획(06-10) 수립상황 및 주요내용, p. 2
 (http://www.korea.kr/main.do에서 2016. 6. 16 인출)
 2) 보건복지부(2010),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p. 3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2. 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p. 3
 4) 보건복지부(2017b),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 14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세부과제(1~3차)

구분	1차(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
세부 과제	1. 공보육 기반 조성 -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확충 - 기본 보조금제도 도입	1. 부모비용부담 완화 - 보육료 지원기준 다양화 -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1. 부모 보육·양육 부담 경감 - 0-5세보육료, 양육수당 전계층지원 -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유기비용 경감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2. 부모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부모 지원 강화	2.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장애아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수당 확대 - 맞춤형기구 0세아 가정 내 양육지원 도입(10년)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아동·가족 특성별 맞춤 지원 - 장애아·다문화아동 맞춤 지원	2.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표준보육비용 설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보육과정 개편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보육 활성화 - 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 활성화	3.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 배치 - 평가인증률 제고 - 취약지역 국공립 및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3.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서비스 질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3.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4.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표준교육과정 개발 보급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수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기관 평가 전문성 제고(10년) - 우수보육사실 근무환경지원(10년)	4. 양질의인심 보육조성 - 보육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질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 이가인 전문보육환경 기반 마련	4. 부모양육지원 확대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개선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자체적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5. 전달체계 효율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10년)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참여, 정보공개 등 민관 협력기반 조성 - 체계적 보육 3.0 시스템 구축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지도점검 자율 시장기회 부여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10년)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보육진흥원 서비스평가 및 관리기구조 개편, 육아중확산(17년 227개) -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 보육사업 국고보조를 인성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54에서 발췌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

지원 유형	사업명	사업 개요
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의료 비용(임신 1회당 단태아 기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신부(3대 고위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원)를 대상으로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만 18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출산, 유산·사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부인 연령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술비(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가정(월평균소득 65% 이하)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관리 서비스(단태아 기준 12일)를 제공하는 제도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임신부와 예비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및 모유수유 등 임신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제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임신·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거점으로 산과·소아과의 통합치료센터를 구축하여 고위험군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이소영(2016).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2. p. 30.

출산·육아지원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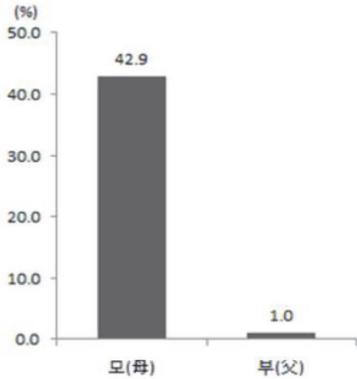
-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함
 -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2.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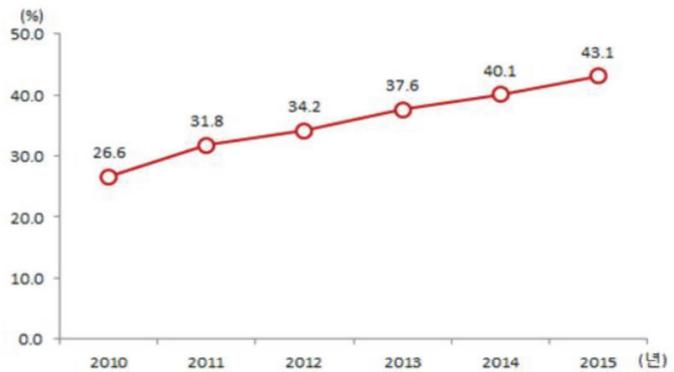
육아휴직 사용률

- 0~5세 자녀를 둔 모(母)의 2010~2015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률은 42.9%임
-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육아휴직 사용률(0~5세) >



<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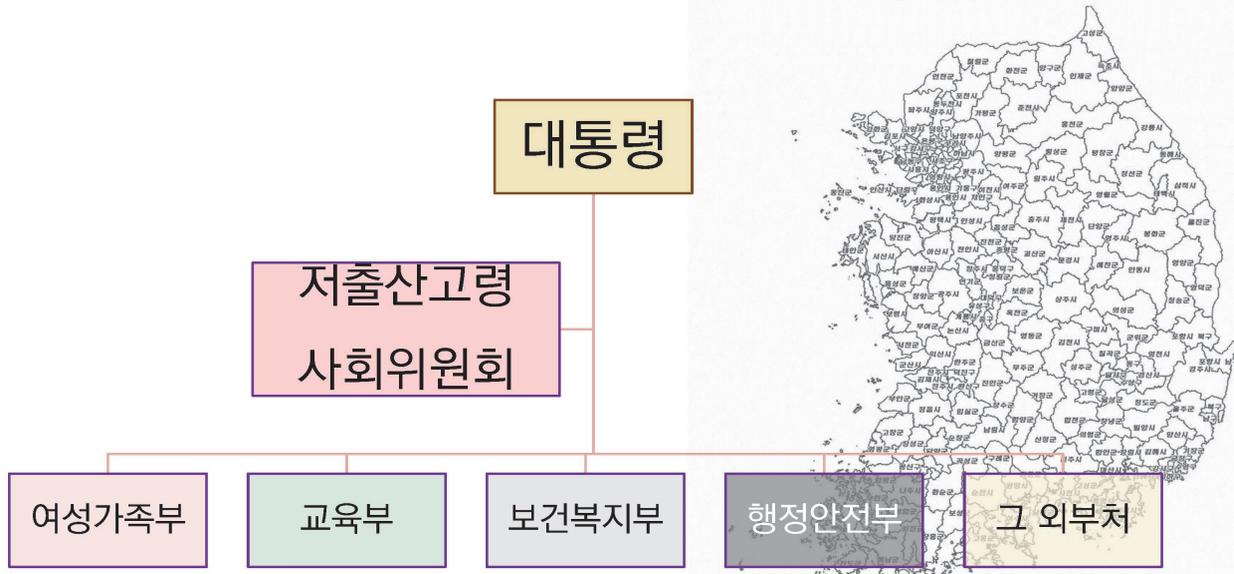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중사자DB」, 「출생DB」, 「영아사망DB」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저출산 정책 추진체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저출산 정책의 전달체계

-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 따라
 - 결혼준비지원, 임신·출산·건강지원, 일과 가족양립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출산 장려정책
 - 합계 출산율 1-3위의 자자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지난 10년('06~'15) 간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실적 및 시사점

구분	성과	시사점
결혼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 일부 대책에 한정 • '14년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결과: 결혼지원 정책은 정책체감도가 가장 낮음 (미혼남녀의 7.8%만이 과거에 비해 결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만혼·비혼 대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대책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본격적 대책을 수립 및 추진 요구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고운맘 카드 도입('08) 등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난임 지원 등 효과성 높은 대책은 집중적 투자를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 극대화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은 낮은 수준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미시적 대책을 넘어서 저출산 현상의 사회구조, 문화와 관련된 거시적 대책까지 확장 필요
보육·돌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기초 하에,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 '13년부터'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 - 보육료지원 아동수 68만명('06) → 148만명('14) - 양육수당 수혜아동 68만명('09) → 101만명('14)	양적 확충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질적 성숙단계로 도약 필요
일·가정양립 지원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 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06)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08)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11)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12) -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14)	공공·대기업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에 중점을 두어 실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21~27, 36.

저출산 정책 이슈

- 만혼과 비혼에 대한 대책 미비
- 다양한 가족관에 대한 포용적 태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 지원 확대
- 거시적 사회조망을 통한 구조적, 문화적 대책 필요
- 부모와 자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 강구
- 공동 육아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촉구
-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사각지대 해소)

저출산의 원인(사회문화적)

- 미혼과 만혼의 증가
 - 소득의 불충분성, 고용의 불안정
 - 주거와 결혼 비용 과다
- 가치관의 변화
 - 결혼관, 자녀관, 삶의 가치
- 자녀양육비 부담(과중한 사교육비)
- 부부의 불공평한 가사와 양육 부담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저출산의 원인(정책집행)

- 저출산 정책의 목표-수단 일치
- 정책 성과와 예산 관리?
- 정책의 대상에 다른 차별성 반영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성
- 유사중복사업의 산재
-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

기본 방향

- 저출산 극복 ⇒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인적자원에 대한 조기 투자
 - 아동의 행복
- 가족의 행복
- 행복한 삶

향후 전략

- 저출산에 대응하는 장기/중단기 계획 설계
- 저출산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
- 정책설계의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 추진
- 생애주기별 저출산대책 설계
- 자녀수에 따른 지원 차별화
-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사회인식 개선

감사합니다

토론

은기수 교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은영 교수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근 교수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신은영 교수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MEMO

MEMO

MEMO

MEMO
